

2027학년도 Booster Shot 모의고사 1회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④	03. ①	04. ④	05. ①	06. ②	07. ②	08. ④	09. ②	10. ⑤
11. ④	12. ⑤	13. ③	14. ①	15. ⑤	16. ④	17. ③	18. ③	19. ③	20. ④

1. 메타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의 입장 비교

(가)는 메타 윤리학, (나)는 이론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한다. 이론 윤리학은 규범적 가치 판단을 기반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삼는다.

[정답 해설] 정답: ②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과 도덕적 논변의 논리적 구조를 검증 및 분석하며,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학문적 지위성을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한다는 것은 윤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즉 다른 학문들처럼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일상 속에서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
- ③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방법을 통해 도덕 관행을 조사 및 설명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에 해당한다.
- ④ 도덕 판단의 논리적 정당화 가능성을 탐구하며 그에 대한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 ⑤ (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도덕성과 부도덕성의 구별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만의 입장이다.

2. 니부어의 사회 윤리 사상 이해

제시문 사상가는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집단의 이기심을 제재하는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며,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④

ㄴ. 니부어는 집단의 이기심이 개인의 이기심보다 강력하다고 보고, 한 집단의 이기심은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견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권력은 본질적으로 자기 확대적 성격을 지닌다. 개인은 양심과 이성의 반성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지만, 집단이 행사하는 권력은 그러한 내적 제어 장치를 거의 갖지 못한다.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편적 선으로 오인하며, 그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언어를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회에서 작동하는 권력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의를 도덕적 설득만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다. **권력을 가진 집단은 도덕적 호소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특권이 위협받지 않는 한 정의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권력은 오직 다른 권력에 의해서만 실질적인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정의는 선의의 확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상충하는 힘들 사이의 긴장과 충돌 속에서 제한적으로 확보되는 것이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ㄷ. 니부어는 사회의 도덕적 이상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강제력,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선도 악도 아닌 가치중립적 도구로 간주한다. 허나 본질적으로 선 또는 악이 아닌 것은 맞으나, 그 강제력이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선의지의 적절한 통제를 받는다면 선으로도 발전 가능한 것이 강제력이다. 악으로 변질된다, 또는 선으로 발전 가능하다는 뜻은 그 자체가, 즉 본질이 선 악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변질, 발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망치가 하나 있다. 그 망치는 선도 악도 아니다. 허나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망치를 도구로 삼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상황에서 과연 망치가 본질적으로 악인가? 아니다. 그 행위 주체는 인간이며, 망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 것 뿐이다. 즉, 인간이 망치의 본래의 성격을 악으로 변질시킨 것이다. 망치를 통해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이 망치가 본질적으로 악이라는 것은 논리적 오류임이 명백하다.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선도 악도 아니며, 죄된 인간과 집단에 의해 사용되는 과정에서 선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권력의 자기정당화 속에서 악으로 타락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한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중략)... 인간은 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나, 동시에 그 선을 자기 정당화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은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러나 죄성 있는 인간의 손에 의해 행사되는 한, 그것은 끊임없이 악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사회 정의란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오답 해설]

ㄱ. 니부어는 국가의 도덕성이 개개인의 도덕적 성취 수준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선한 개인일지라도 개개인이 집단으로 모이면 이성의 힘이 약화되기에 항상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니부어에게 집단이란 단순한 개인의 총합이 아니라 독자적 운영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열등하다고 보았다.

개인들은 이성적 능력을 통해 정의감을 키워 나갈 수 있고 이기주의적 성향을 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사회와 사회 집단들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 차원과 비교해 볼 때, 훨씬 획득되기 어렵다. 집단이 클수록 그 집단은 전체적인 인간 집단에서 스스로를 이기적으로 표현한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개인은 도덕적 성찰의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성적 판단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이 도덕적 이상을 인식하고, 때로는 그 이상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든다. 개인의 도덕적 삶은 이러한 자기 초월의 가능성 위에서 성립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덕적 능력은 집단의 차원으로 옮겨지는 순간 근본적인 변형을 겪는다. 집단은 개인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개인들이 각자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에게 작동하던 양심과 자기비판은 약화되며, 집단의 이해관계는 구성원 각자의 도덕적 판단을 압도하게 된다. 그 결과 집단은 개인보다 더 강한 이기성을 드러내며, 스스로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훨씬 능숙해진다. - 니부어, 『인간의 본성과 운명』

3. 칸트의 윤리 사상 이해

제시문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인간을 자율적 도덕 생활의 주체로 보았다.

[정답 해설] 정답: ①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계발해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의무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정언 명령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모순된다.

이건 알아두자. 칸트는 의무를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로 구분하였다. 완전한 의무란 예외없이 지켜야 하며 특정한 행위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거나 금지한다. 또한 행위 방식에 재량이 없다. 따라서 완전 의무의 근거는 준칙이 보편화될 경우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살 금지, 거짓말 금지가 완전한 의무에 속한다. 반면 불완전 의무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행할지는 재량이 허용된다. 즉, 특정 행위를 필연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완전 의무의 근거는 준칙이 보편화되면 의지는 성립 가능하나 목적이 훼손된다. 자기 계발의 의무, 자선의 의무가 불완전 의무에 해당한다. (“불완전 의무의 근거는 준칙이 보편화되면 **의지는 성립 가능하나 목적이 훼손된다.**”를 더 풀어 설명해보겠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도 논리적으로 말은 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할 수는 없다’ 와 같은 의미이다. **의지는 성립 가능하다 = 논리적 모순은 없다** 즉, 모두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상상 자체는 가능하며 규칙이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목적이 훼손된다 = 원할 수 없는 세계가 된다** 즉, 그 준칙을 따르면 내가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나는 편안한 삶을 위해 자기 계발을 하지 않겠어”라고 주장했다고 가정하자. 이 준칙이 보편화된다고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가? 논리적 모순이 있는가? 전혀 없다. 단 그가 합리적 존재로서 목적 실현과 능력 발전을 원한다면 그의 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의지의 모순이 생긴다. 자선의 의무도 같은 맥락이다. 아무도 기부하지 않아도 사회는 유지된다. 단 내가 곤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길 원할 수 없다.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의무는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필연적 명령으로서, 경험적 목적이나 경향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의무가 동일한 방식으로 의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무는 그 위반이 곧바로 도덕법칙의 자기모순을 낳는 반면, 어떤 의무는 위반이 논리적 모순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이성적 의지의 목적 자체를 훼손한다. 이 차이에 따라 의무는 완전 의무와 불완전 의무로 구분된다. 완전 의무는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으로 의지될 경우 스스로를 파괴하는 종류의 의무이다. 거짓 약속이나 자살과 같은 행위의 준칙은, 만일 그것이 보편적 법칙이 된다면 그 행위가 성립할 조건 자체를 소멸시킨다. 이러한 경우 이성은 해당 준칙을 결코 의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언제나 금지된다. 완전 의무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며, 행위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 **반면 불완전 의무는 그 준칙이 보편화되더라도 논리적 모순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예컨대 타인의 행복 증진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자신의 능력을 전혀 계발하지 않는 삶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준칙은 이성이 필연적으로 의욕하는 목적, 즉 인간성의 존엄과 이성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훼손한다.** 이성은 이러한 세계를 의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준칙 역시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불완전 의무는 완전 의무와 달리 행위의 구체적 방식과 시기를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불완전 의무는 특정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의지가 일정한 목적을 자신의 준칙 속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이 의무는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만, 그 목적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해야 하며, 타인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지만, 그 구체적 실현 방식은 상황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완전 의무와 불완전 의무의 구분은 도덕법칙의 강약 차이가 아니라, 의무가 의지를 구속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전자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방식으로 의지를 규정하며, 후자는 의지가 지향해야 할 목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지를 규정한다.

- 임마누엘 칸트, 『도덕형이상학 정초』

[오답 해설]

②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란 선형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으로 형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의지는 경험을 통해 획득되거나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성향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특정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산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질도 아니며, 교육이나 습관을 통해 축적되는 덕목도 아니다. 선의지는 오히려 모든 경험적 조건에 앞서, 의지가 도덕법칙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 자체로서 주어진다. - 임마누엘 칸트, 『도덕형이상학 정초』

- ③ 칸트에 따르면 의무는 어떤 것을 위한다는 특정 조건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옳은 것이므로 의무가 자신의 욕구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 ④ 칸트에 따르면 선(善)은 공동체의 관행과 무관하게 선형적으로 규정된다. 공동체의 관행에 내재된 선의 실천을 주장하는 사상가는 매킨타이어이다.
- ⑤ 칸트에 따르면 의무는 그 자체로 옳은 것이기에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의무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공리주의이다.

4. 평화와 폭력에 대한 갈통 입장 파악

그림의 강연자는 갈통이다. 갈통은 진정한 평화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모두 소멸된 상태라고 보았다.

[정답 해설] 정답: ④

갈통에 따르면 문화가 폭력의 정당화 기능뿐만 아니라 평화의 정당화 기능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갈통은 문화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문화적 평화가 구조적 평화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폭력은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삼각형에 있어 어떤 꼭짓점에서도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꼭짓점으로 쉽사리 전달된다. 제도화된 폭력적 구조와 내면화된 폭력적 문화와 더불어 직접적 폭력은 또한 장기간에 걸친 복수전처럼 제도화되고, 반복되고, 의식화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폭력에 대한 이러한 삼각형적 중후군은, 마음속에서 문화적 평화가 다양한 상대들 간의 공생적이고 동등한 관계와 더불어 구조적 평화를 낳고, 그리고 협력의 활동과 우정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직접적 평화를 낳은 평화의 신드롬과 대비되어야 한다.**
- 갈통 『평화적 수단을 위한 평화』

[오답 해설]

- ① 일방향적 관계는 한쪽으로만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의미이다. 갈통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폭력의 삼각형을 이루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폭력이든 폭력의 시작점이 되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세 종류의 폭력은 일방향적이지 않다.
- ② 갈통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폭력의 삼각형을 이루며 상호작용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직접적 폭력 역시 문화적 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관계가 일방향적으로 고정되지는 않는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에 선행하여 폭력을 정당화할 수도 있으며, 폭력 이후에 강화·재생산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적 폭력을 직접적 폭력의 사후적 결과로 한정하는 것은 폭력 간의 상호작용성과 비교정성을 간과한 것으로, 갈통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 갈등에 따르면 문화적 폭력은 특정 집단이나 권력이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이 자각하지 못한 채 내면화한 관습과 가치 속에서 비의도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시적인 폭력은 신체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직접적 폭력에 해당하며, 문화적 폭력은 상징·이념·언어와 같은 의미 체계 차원에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가시적 폭력으로 이해된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총과 몽둥이처럼 즉각적인 고통을 가하지도 않고, 제도처럼 명문화된 규칙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오히려 문화적 폭력은 종교, 이데올로기, 언어, 예술, 과학과 같은 의미 체계 속에 스며들어, 폭력을 폭력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 갈등, 『폭력, 평화, 그리고 평화연구』

문화적 폭력의 가장 위험한 특징은 그것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지속된다는 점에 있다. 사람들은 폭력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피해자조차 자신의 고통을 개인의 실패나 운명으로 내면화한다. - 갈등, 『평화적 수단을 위한 평화』

- ⑤ 갈등에 따르면 문화적 폭력은 폭력 그 자체를 노골적으로 긍정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의미 체계를 통해 작동한다. 따라서 사회가 표면적으로 폭력에 대해 부정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고 있더라도, 특정한 목적이나 상황에서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면 문화적 폭력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어떤 폭력은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어 비난받는 반면, 다른 폭력은 질서 유지, 발전, 문명화, 혹은 불가피한 희생이라는 언어로 재해석된다. 이때 폭력은 더 이상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 갈등, 『평화적 수단을 위한 평화』

5. 롤스와 노직의 분배정의론 비판 구도 이해

제시문의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더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직은 개인이 자신의 자연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자연적 자산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소유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다.

[정답 해설] 정답: ①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원칙이 아니라, 그러한 불평등이 사회 협력 체계 속에서 모든 성원의 기대 전망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하는 원칙이다. 즉,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 이익이 다른 성원들의 자유와 협력 구조 속에서 함께 증진되는지를 동시에 판단한다. 그럼에도 노직은 차등의 원칙을 최소 수혜자만을 위한 결과 중심의 원칙으로 해석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협력 조건을 고려하는 롤스의 취지를 간과한다. 따라서 롤스는 노직이 차등의 원칙의 적용 범위와 성격을 오해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복한 위치에 있는가는 아무런 본질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오직 요구되는 제한 조건에 따라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만을 극대화하면 된다. **차등의 원칙이 만족될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그에게 제시된 이익에 의해서 이득을 볼 것이며, 처지가 못한 자도 이러한 불평등이 주는 기여에 의해서 이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자들은 최소 수혜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롤스, 『정의론』

[오답 해설]

- ②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기준은 사전에 정해진 분배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가 공적으로 승인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설계되고 운영되는지에 있다. 따라서 공적 정의관은 분배 결과의 옳고 그름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 산출된 결과를 수용한다. 롤스가 절차적 정의관 사상가라는 것을 기억하자.
- ③ 노직이 제시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노직에 따르면 정형적인 원리는 (1) 역사적인 정형 이론과 (2) 비역사적인 정형 이론으로 구분된다. 먼저 첫 번째로 도덕적 공과, 개인의 노력, 업적 등은 역사적인 정형 원리이다. 왜냐하면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공로가 어떠한지’, ‘과거부터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과거부터 어떠한 업적을 쌓았는지’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시간적 과정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정형 원리인 것이다. 둘째로 지능 지수, 공리의 종합(사회적 유용도) 등은 비역사적인 정형 원리이다. 왜냐하면 이는 역사적 정형 원리와 달리 현재의 IQ가 몇인지, 현재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현재 시간 단면 원리’라고도 지칭된다.

정형화된 비역사적 이론	지능 지수, 공리의 종합과 같이 객관적인 분배 기준을 가지고 있고, 소유물 획득의 역사적 과정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분배 구조 혹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정의론		
역사적 이론	분배와 소유의 정당성을 역사적 과정에 대한 추적을 통해 판단하려는 정의 이론	정형화된 이론	노동 시간, 노력, 업적, 도덕적 공과(상점) 등 고정되어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인정
		<u>비정형화된 이론</u>	고정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음.

노직은 역사적 이론 중 비정형화된 이론만을 긍정한다.

- ④ 노직이 제시할 수 있는 비판으로도, 롤스가 간과하지도 않는다. 롤스에 따르면 개인이 타고난 재능과 사회적 출발선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에 해당하며, 이러한 우연한 요소가 사회적 이익의 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롤스는 개인의 자연적 재능이 사회 협력 체계 속에서 형성되고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⑤ 롤스가 간과하지 않는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두 원칙 가운데 제1원칙은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한 보장을 요구하며, 제2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모든 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의 기대 전망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때 재화의 평등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분배 방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롤스는 불평등이 정당화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재화의 평등 분배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어떤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 수혜자의 지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 불평등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선택은 불평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재화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 롤스, 『정의론』

6. 짐멜의 유행에 대한 입장 파악

제시문의 사상가는 짐멜이다. 짐멜은 유행은 한편으로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결합을 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 폐쇄성을 의미하며, 그와 동시에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②

짐멜에 따르면 유행은 계층적으로 분화하면서 타 집단과의 차별화 욕구를 추구하므로, 상류 계층에 속하지 못한 집단들에 대한 상류 계층의 집단적 폐쇄성을 조장할 수 있다.

유행은 사회적 통합과 차별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특히 계층 간 관계에서는 상류 계층의 집단적 폐쇄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유행이 존재하는 한, 계층 간의 경계는 완전히 해체되지 않으며, 오히려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된다.

- 게오르크 짐멜, 『유행(mode)』

[오답 해설]

- ① 짐멜에 따르면 유행은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와 차별화 욕구를 만족하려는 인간의 심리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 ③ 짐멜에 따르면 유행은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하므로 계층적으로 분화되지 않는 경우에 지속될 수 없다.
- ④ 짐멜에 따르면 유행은 하류층에 의해 동화되어 사회적 신분 간에 차별성이 사라진 경우에 소멸될 수 있다.
- ⑤ 짐멜에 따르면 유행은 궁극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려는 욕구를 기반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타자와의 동화를 추구한다.

7. 죽음에 대한 에피쿠로스와 장자의 입장 파악

제시문의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장자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고통으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에피쿠로스는 죽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통을 느낄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보며, 진인은 삶과 죽음의 관계를 깨달아 만물의 근원인 도(道)로 돌아가는 자라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②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선과 악은 쾌와 불쾌라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만 성립하며, 경험되지 않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은 영혼과 육체를 구성하는 원자가 흩어지는 상태로,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감각이나 경험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쾌도 고통도 수반하지 않으며, 인간에게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선과 악은 감각에 의해 성립하지만, 죽음은 감각의 완전한 소멸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존재하는 곳에는 더 이상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에피쿠로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오답 해설]

- ①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은 '다음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단절로서 원자의 흩어짐으로 이해된다. 자연의 순환과정이란, 불교식 윤회 개념과 같은 말로 유물론자인 에피쿠로스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③ 장자에 따르면 삶과 죽음은 기(氣)의 응집과 흩어짐이라는 자연의 변화 과정으로 이해하며, 인간이 설정한 규범적 가치 판단이나 인위적 예법을 그 변화에 강제하는 것을 비판한다. 장자에게 예는 인간 사회가 만든 인위적 규범에 불과하며, 이를 삶과 죽음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연의 도(道)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 ④ 장자에 따르면 기의 응축과 흩어짐은 인간의 인식이나 관점에 의해 규정되는 주관적 현상이 아니라, 도(道)에 따라 스스로 그러하게 이루어지는 자연의 객관적 변화 과정이다. 물론 인간이 삶과 죽음을 분별하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인식이 기의 변화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 ⑤ 갑(에피쿠로스)과 을(장자) 모두 반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인 원자는 죽음 이후에 소멸하지 않는다. 장자도 역시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인 기가 죽음 이후에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본다.

8.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이해

제시문의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담론 절차를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④

하버마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규범의 보편 타당성을 성립시킬 수 없으므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전제된 공론장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이때 공론의 결과로 도달한 합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주관적 인정에 따라 평가됨으로써 규범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명제적 진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규범의 올바름과 주관적 진실성에 대한 타당성 주장 역시 상호 주관적 인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제적 진리와 효율성에 대한 타당성 주장과 결합된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규범의 올바름과 주관적 진실성에 대한 타당성 주장과 결합된 발언도 합리성의 중심 전제, 즉 근거가 제시되고 비판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 -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이론』

하버마스는 논증적 토론으로서의 담론에서 담론 참여자들이 명제적 진리와 규범의 올바름 그리고 주관적 진실성을 갖춘 주장을 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토론을 통해 상호 주관적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 2025학년도 수능완성 98쪽

[오답 해설]

- ① 하버마스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행위 능력도 담론 참여의 조건이라고 본다.

말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롭게 담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 욕구 등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때 내부나 외부의 강요 때문에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 - 2025학년도 수능특강 158쪽

- ② 하버마스는 시민 사회 내부에서 작동하는 의사소통의 영역이 공론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학술적 영역에서의 공론장뿐만 아니라, 언론 및 미디어에서의 공론을 비롯하여 문화·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공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토의 정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쟁하는 여론들을 만들어 내는 정치적 공론장의 역할에 있어 미디어 체계는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 ...(중략)... 시민 사회의 행위자들에게는 일상생활과 공공 행사에서의 대면 만남이 자신의 이니셔티브가 발산되는 두 가지 공론장의 근거리 영역이지만, 대중 매체가 유도하는 공적 의사소통만이 의사소통적 소음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여론으로 응축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중략)... **공간과 시간의 경계가 전 지구적으로 해체되면서 의사소통의 흐름은 동시에 응축되고, 기능과 콘텐츠에 따라 분화, 복제되었으며, 문화·계층별 경계를 넘어 일반화되었다.**

- 하버마스,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 변동』

- ③ 하버마스는 담론을 통해 도달한 합의에 개인에 대한 도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들은 담론을 통해 합의된 규범을 실천할 것을 서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이러한 합의는 참여자 모두에게 도덕적 구속력을 부여하며, 이는 외적 권력이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담론 참여의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된다. **담론 참여자들은 서로가 합리적 논증과 토론을 통해 도출한 규범을 실천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대 자체가 규범의 정당성과 효력을 보장한다.** 규범의 효력은 합의 자체에서 비롯되며, 합리적 담론 참여자가 규범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담론의 기본 원리가 훼손된다. 합의된 규범은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된 사회적 합의'가 아니며, 모든 참여자가 보편적 타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개인에게 의무가 된다. - 하버마스, 『윤리적 담론의 구조적 조건』

- ⑤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들에게는 주장을 제시, 해석, 권고, 정당화, 반박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위해 담론 참여자들은 행위자로서 기분, 느낌, 바람을 표현할 기회 역시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하버마스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보편타당한 규범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합의가 규범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담론 참여자들이 의사소통 행위를 행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해석, 주장, 권고, 정당화 등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문제 삼거나 반박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화자들은 행위자로서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 바람을 표현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사람들로 한정해야 하고, 행위자로서 명령하거나 저항하고,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약속하거나 약속을 파기하고, 해명하거나 해명을 요구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사람들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2025학년도 수능특강 154쪽

9. 칸트, 레건, 테일러의 자연 윤리 사상 이해

제시문의 갑은 칸트, 을은 레건, 병은 테일러이다. 칸트는 이성이 결여된 자연은 도덕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다만 인간의 도덕적 의무의 간접적 대상이라고 본다. 레건은 일부 동물이 쾌고 감수 능력, 기억, 선호, 복지,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지닌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존, 성장, 발전 등 자기 보존을 향한 목적 지향적 활동을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자 고유한 목적을 지닌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이들 모두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본다.

[정답 해설] 정답: ㉔

- ㄱ. 문장을 역으로 바꿔 다시 서술하자면 “동물에 관련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는 의무이다.” 칸트에 따르면 동물에 관련된 우리의 의무는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의무의 확장으로 이해된다.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잔인성을 키우고 인간 상호 간의 도덕성을 해치기 때문이지, 동물 자체의 권리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동물 관련 의무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반면 레건과 테일러는 동물이 도덕적 고려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동물에 대한 의무가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독립적 의무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레건은 동물을 “도덕적 무능력자 (moral patient)”로 보며, 인간 중심적 의무론에 환원할 수 없다고 하고, 테일러는 생명 전체의 내적 가치 (intrinsic value)를 강조하여 인간 중심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 ㄴ. 갑(칸트), 을(레건), 병(테일러) 모두 동의할 선지이다. 칸트에게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인간, 레건에게는 인간과 1살 이상의 정상적 포유동물, 테일러에게는 인간, 동물, 식물 즉 생명체라면 모두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세 사상가 모두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간 상호 간에 호혜적 책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오답 해설]

- ㄴ. 을(레건)뿐만 아니라 병(테일러)도 동의할 선지이다. 레건은 동물을 도덕적 무능력자 (moral patient)로 간주하며, 인간이 그들의 이익을 존중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동물을 단순히 인간의 수단이나 자원으로 취급하면, 그들의 고유한 권리와 도덕적 고려 대상성을 무시하게 되므로 잘못된 행위로 판단한다. 테일러는 생명 전체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며,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만 동물을 바라보는 것을 거부한다. 동물을 단순한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 내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옳지 않다.

동물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각종 행위, 즉 실험, 매매, 사냥, 식용 등이 비윤리적인 이유는 그것이 동물에게 단순히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기보다 동물이 지닌 가치와 권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 레건, 천체 생운 교과서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동물 학대 및 동물 실험 등 동물에 대한 비도덕적 관행에 반대한다.

- 레건, 미래엔 생운 교과서

나는 주체(subject-of-a-life)로서 자신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동물을 단순한 자원이나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경험하고, 선호를 가지고, 고통과 쾌락을 느낀다. 인간이 동물을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할 때, 우리는 그들의 내재적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 그 결과, 동물의 권리와 존엄성은 훼손되고, 우리는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게 된다. 동물은 인간의 필요와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생명과 경험을 가진 존재이며, 인간은 그들의 생명, 감각, 선호, 복지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레건, 『제1부, 주체로서의 동물 권리 논증』

...(중략)... 자연을 단순히 인간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환원하는 모든 사고를 거부한다. 생명체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의 존재는, 그 자체로 존중의 대상이며, 모든 인간적 고려와 도덕적 판단은 이 내재적 목적성과 가치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ㄷ. 갑(칸트), 을(레건), 병(테일러) 모두 동의할 선지이다. 칸트에 따르면 자율적 도덕 법칙의 수립자로서 존엄한 인간은 동물, 식물, 무생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레건에 따르면, 인간과 1살 이상의 정상적 포유동물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지위 측면에서 우월성이 없지만, 식물이나 무생물보다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본다.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은 무생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며 무생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고 본다.

10. 비판적 합리주의 이해하기[포퍼]

그림의 신문 칼럼은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해 설명하며 진리를 얻기 위해 비판적 합리주의자들이 갖춰야 할 태도를 명시하고 있다. 칼럼에 따르면 비판적 합리주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다른 의견을 포용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오류 가능성을 서로 인정함으로써 독선을 피할 수 있으며, 우리가 열린 자세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사실 비판적 합리주의자로 대표되는 사상가 포퍼의 저서를 인용해 칼럼으로 재구성한 제시문으로 2023년 6월 17번(문화 관용의 필요성)과 2025년 수능 13번으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 포퍼는 따로 공부해놓도록 하자. 참고로 2025년 수능 13번 문제의 정답률은 45%였다.)

[정답 해설] 정답: ⑤

제시문의 칼럼에 근거할 때 인간은 이성에 오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어떠한 견해라도 그것을 독단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항상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로써 비판과 논증, 그리고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긍정과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 **인간은 함께 노력해야만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합리주의는 비판적 논증과 반박에 귀를 기울이며, 경험으로부터 배울 용의가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경험 세계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명제의 경우, 이는 언제나 반박될 수 있어야 한다. 경험 과학 이론은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뒤집어질 수 있다. 이론의 과학성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증 가능성이다. 이론에 대한 모든 관찰은 그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반증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 2025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3번

진리란 완전히 확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따라서 모든 이론과 주장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비판과 검증이 필요하다.**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함으로써 지식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며, 이는 단순한 수용이나 권위에 의한 확신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 카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비판적 합리주의자는 자신의 지식과 신념이 언제나 오류를 포함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주장도 절대적 진리가 아니므로, 항상 비판과 검증을 거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장과 이론도 열린 마음으로 평가하며, 반증 가능한 근거에 따라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지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며, 합리적 사고를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 카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 ① 칼럼에 근거하면 비판적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이 본질적으로 오류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며, 진리는 개인의 확신이나 권위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비판과 논증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된다고 본다. 따라서 오류는 타인의 비판을 통해 드러날 수 있으며, 개인의 논박 기회는 진리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또한 비판적 합리주의는 누구도 자신의 판단을 최종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타인의 이성에 대한 신뢰와 비판의 개방성을 중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논박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오류 수정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히려 독단과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비판과 토론이 억압되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한다. **논박의 기회는 단순한 의견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권위와 교조주의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비판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개인의 합리성은 유지되고 사회는 열린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

— 카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인간의 지식은 언제나 잠정적이며, 어떤 주장도 비판에서 면제될 수 없다. 개인에게 보장된 논박과 반론의 기회는 진리를 선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류를 드러내고 제거하기 위한 절차이다. 공개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만 잘못된 주장들이 도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식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

— 카를 포퍼, 『과학적 발견의 논리』

- ② 칼럼에 따르면 비판적 합리주의는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오류는 자신이나 타인의 비판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신념도 비판에서 면제될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어 판단의 최종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칼럼은 타인의 이성에 대한 신앙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강조한다. 이는 특정 신념을 절대화하여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논증과 비판을 통해 신념을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 ③ 칼럼에 따르면 누구도 자신의 판단을 최종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는 무사공평한 태도를 강조한다. 이는 특정 가치나 전제를 선형적으로 옳다고 가정하는 태도와 배치된다.

편견과 차별은 특정 전제나 가치가 비판에서 면제될 때 강화된다. 미리 가정된 전제나 가치가 당위적으로 수용될 경우, 그것은 검토와 수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조주의로 굳어진다. 비판적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편견의 극복은 어떤 가치의 무비판적 수용이 아니라, 그 가치와 전제 자체를 공개적 비판과 논박에 노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편견과 차별의 해소를 미리 채택된 전제의 당위적 수용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 태도와 양립할 수 없다.**

— 카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 ④ 칼럼에 따르면 비판적 합리주의자가 설령 자신이 타인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더라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이성에 대한 신앙과 무사공평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과학적 태도는 타인보다 옳다는 것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이론이 비판에 의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 카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11. 칼뱅과 플라톤의 직업관 이해하기

제시문의 갑은 칼뱅, 을은 플라톤이다. 칼뱅은 근면 성실하고 검소한 생활과 직업의 성공이 신(信)에 의한 구원의 현세적 징표가 된다는 직업 소명설을 주장한다. 플라톤은 나라가 올바르게 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야 하며 특히, 통치자와 방위자는 그 어떤 사유 재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④

ㄱ. 칼뱅에 따르면 각 개인의 직업은 신이 부여한 소명이며, 성실하고 규율 있는 노동은 신의 뜻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다. 이러한 노동은 향락이나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이다. 또한 칼뱅은 부의 축적 자체를 죄악으로 보지 않는다. 부는 신의 축복일 수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금욕적 태도를 유지한 채 성실한 노동의 결과로 부가 축적되는 것은 신의 소명을 훼손하지 않으며, 오히려 신의 질서에 충실한 삶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직업은 신이 각 개인에게 부여한 소명이며, 성실하고 절제된 노동은 신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금욕적 노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의 축적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만과 방탕으로 흐르지 않고 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명의 충실한 실현과 양립할 수 있다.** 문제는 부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태도에 있다.

— 장 칼뱅, 『기독교 강요』

ㄴ. 칼뱅에 따르면 구원 여부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오직 신의 절대적 예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직업 생활에 충실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성실한 직업 활동과 금욕적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선택된 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징표에 불과하다. 직업적 충실함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으며, 외적 행위만으로는 예정된 구원을 확정할 수 없다.

직업적 성실성이나 도덕적 삶은 구원의 증표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확증할 수 없으며, 오직 신의 은총에 의존할 수 있을 뿐이다. — 장 칼뱅, 『기독교 강요』

구원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업적 삶의 성실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요, 은혜로 선택된 자에게서 마땅히 따라 나오는 삶의 열매이다. — 장 칼뱅, 『기독교 강요』

ㄷ. 갑(칼뱅), 을(플라톤) 모두 동의할 선지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계층이 자기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질서 위에 성립한다. 이때 절제는 개인의 욕망이 이성을 넘어 공동체의 조화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덕목으로, 통치자·수호자·생산자 모두에게 요구된다. 각자가 자신의 몫에 만족하며 타인의 역할을 넘보지 않을 때 공동체의 조화가 유지되므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데 절제는 필수적이다. 칼뱅에 따르면 각 개인의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이해하며, 그 수행에는 금욕과 절제가 요구된다고 본다. 절제 없는 노동은 사치와 향락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며, 이는 신의 뜻에 대한 순종을 훼손한다. 즉, 공동체 안에서 맡은 일을 수행할 때 절제는 신의 질서에 합당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덕목이다.

[오답 해설]

- ㄷ. 플라톤에 따르면 절제는 욕망이 이성과 기개에 복종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이성(지혜)과 기개(용기)가 올바르게 기능하는 사람이라면, 욕망이 이를 거스르지 않으므로 절제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반면 절제는 모든 계층과 개인에게 요구되는 조화의 덕이기 때문에, 절제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이성의 탁월함)나 용기(기개의 확고함)를 가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즉, 절제는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통치자로 선발되는 자는 단지 앞에 도달한 사람만이 아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욕망을 절제하는 훈육을 받았고, 시련과 위험 속에서도 법과 이성이 명령한 바를 지켜내는 성품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과한 자 가운데서만, 마침내 선의 인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가려진다. 참된 통치자는 욕망의 절제를 몸에 익히고,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보전하며, 전체에 무엇이 이로운지를 아는 앞에 이른 자이다
— 플라톤, 『국가』

인간의 영혼은 그 작용에 따라 서로 다른 세 원리로 드러난다네. 사유하고 숙고하며 전체를 살피는 이성적 부분, 명예와 분노를 통해 결단을 지탱하는 기개적 부분, 그리고 생존과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적 부분이 그것이야. 이 구분은 개인의 영혼에만 머무르지 않고 올바르게 구성된 국가의 질서 속에서 확대된다네. 국가는 커진 인간이며, 영혼의 형식은 국가의 형식으로 반영됨이 명백하지 않겠는가? — 플라톤, 『국가론』 (이환 편역)

이성적 부분이 지배하는 영혼에서는 무엇이 전체에 이로운지를 아는 앎이 중심에 선다. 이러한 형식은 국가 안에서 통치자로 구현되며, 통치자의 덕은 지혜이다. 지혜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선을 식별하고 이를 질서 있게 이끄는 앎의 상태로 드러난다. ...(중략)... 기개적 부분이 올바르게 형성된 영혼에서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교육과 법이 심어준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형식은 국가 안에서 방위자로 나타나며, 방위자의 덕은 용기이다. 용기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신념이 시련 속에서도 보존되는 상태로 드러난다. ...(중략)... 욕망적 부분은 그 자체로 질서를 이루기보다, 상위의 원리에 따라 제 자리를 지킬 때 조화를 이룬다. 국가 안에서 이 부분은 생산자로 나타나며, 이들이 갖추어야 할 덕은 절제이다. 절제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성질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걸쳐 각자가 자기 몫을 넘어서지 않도록 만드는 합의와 조화의 상태로 성립한다.
— 플라톤, 『국가』

12. 배아 복제에 대한 쟁점 파악

갑은 배아 복제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을은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답 해설] 정답: 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갑은 초기 배아는 생명이 없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배아 복제는 인간 생명의 파괴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을은 배아 복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잉여 배아의 폐기는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본다.

[오답 해설]

- ① 갑과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갑은 초기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간주하면서 배아 복제는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을은 배아 복제는 현존하는 인격이 아니라 잠재적인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 ② 갑과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갑은 초기 배아는 도덕적 권리가 없다고 본다. 갑은 초기 배아가 도덕적 권리가 없다고 본다. 한편 을은 배아 복제를 도덕 주체의 권리가 아니라 도덕 객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 ③ 갑과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갑은 생성된 지 2주 이하의 초기 단계의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 ④ 갑과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갑과 을 모두 배아 복제 기술은 인류의 불치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3. 기술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입장 파악

가상 대담 사상가 갑은 하이데거, 을은 야스퍼스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으므로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야스퍼스는 기술 자체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즉 수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술은 인간의 행위, 의도가 없다면 악이 될 수 없다.

[정답 해설] 정답: ③

야스퍼스에 따르면 기술은 스스로 목적이나 가치를 지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수단적 힘에 불과하다.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며,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는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은 독립적인 도덕 주체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을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사용되기 전까지는 방향을 갖지 않은 힘으로 머문다. 이 힘은 선을 명령하지도, 악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오직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사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기술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사태의 핵심을 벗어난다.

— 카를 야스퍼스, 『시대의 정신적 상황』

기술은 인간 존재의 수단으로서 비어 있는 가능성이다.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는 힘으로 전환되는지는, 인간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한계를 인식하는가에 달려 있다.

— 카를 야스퍼스, 『철학』

야스퍼스에 따르면 기술은 그 자체로 도덕적 성격을 갖지 않는 공허한 힘이며, 도덕적 책임은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귀속된다. — 천재 생운 교과서

[오답 해설]

- ① 하이데거에 따르면 기술의 본질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드러냄(Aletheia, 진리로서의 비은폐)의 한 방식이다. 현대 기술의 본질은 게슈텔(Gestell, 소여·가용화)로서, 존재자를 단순한 자원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특정한 방식의 ‘드러냄’이다. 즉 기술은 존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방식으로 과도하게 드러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존재자는 자원으로만 파악되고, 다른 방식의 드러냄 가능성은 가려진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의 본질이 ‘숨김’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드러냄 방식이 다른 드러냄 방식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게슈텔[Gestell]은 존재자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드러냄이 아니다. 그것은 미리 규정된 방식으로만 나타나도록 강제하는 탈은폐의 양식이다. 현대 기술의 드러냄 속에서 존재자는 ‘존재함’이 아니라 ‘저장 가능한 것’, ‘언제든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마르틴 하이데거, 『기술에 대한 물음』

- ②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대 기술의 본질인 게슈텔(Gestell)은 인간과 세계를 모두 자원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사유의 틀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자원을 관리하고 동원하는 주체로 이해하게 되며, 동시에 자신 역시 하나의 자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하이데거가 문제 삼는 핵심은 바로 이 비자각성이다. 인간은 기술에 지배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기술의 문제나 자신의 실존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적 사고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현대인은 기술에 의해 비인격적 존재로 전락했음을 명확히 인지한다고 보지 않는다.

요즘 현대인은 세계를 하나의 세계상으로 파악하며, 이 파악 방식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대상화되었다고 인식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세계를 대상화하는 주체로 자임하면서 동시에 그 질서 안에 배치된다.
 — 마르틴 하이데거, 「세계상의 시대」

현대 사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술을 피할 수 없고 기술적이 아닌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기술은 세상 전체로 자체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오늘날 기술은 그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도록 요구받는 새롭고도 특정한 환경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사고와 감정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은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인간이 이에 저항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기술을 발전시킬 자유도, 사용하지 않을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또 다른 기술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자가 증식은 기술 간의 결합 원리로 작동하게 된다. 기술은 진정으로 자율적인 것으로서 기술 간에서 연결되고 의존하여 작동하는 일종의 거대한 체계이다. 거대한 기술 체계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움직이므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 앞에서 무력해지며, 오히려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이 기술에 종속되는 것을 인간의 성장으로 간주하는 기술화된 인간으로 전락하여 몰개성화된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위해 인간에게는 기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기술적 성장에 반대되는 기술적 탈성장이 요구된다.
 — 2026학년도 수능완성 66쪽

갑: 현대인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2025학년도 6월 5번

- ④ 야스퍼스에 따르면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나 가치를 지니지 않는 공허한 힘이며, 선이나 악의 방향성을 스스로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은 자율적 주체처럼 독자적인 목적에 따라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 기술은 목적을 설정하지도, 의미를 생성하지도 않으며, 도덕적 판단의 대상 역시 될 수 없다. 기술이 인간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기술이 목적을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식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의 작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인간에게 귀속된다.
- ⑤ 갑(하이데거), 을(야스퍼스) 모두 부정할 선지이다.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모두 기술의 본질에 대해선 입장이 다를 수 있으나 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4. 칸트와 모겐소의 국제 정치에 대한 입장 파악하기

제시문의 갑은 칸트, 을은 모겐소이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평화 연맹의 역할은 가입국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모겐소는 국제 관계는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권력 투쟁의 연속이라 보고, 그 속에서 국가들은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①

ㄴ. 모겐소에 따르면 국제사회에는 이를 강제할 상위 권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화는 도덕적 이상이나 법적 규범이 아니라 권력 관계의 안정적 균형을 통해 유지된다. 국가들은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지만, 세력 균형이 형성될 경우 어느 한 국가도 패권을 장악하기 어렵게 되어 상호 견제가 작동한다. 이러한 상호 견제 구조는 국가들이 과도한 팽창이나 공격적 행동을 자제하도록 만드는 자기 조절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세력 균형은 전쟁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충돌의 가능성을 억제하여 상대적 평화를 유지하는 현실적 장치로 평가된다.

세력 균형은 국제사회의 도덕적 진보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권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행동을 반복하는 가운데 유지되는 정치적 메커니즘이다.

— 한스 모겐소, 『국제정치』

국제정치에서 세력 균형은 외부에서 설계되거나 도덕적 이상에 의해 유지되는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각 국가가 자신의 생존과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자기조절의 질서이다. 어느 한 국가의 힘이 과도하게 팽창할 때, 다른 국가들은 위협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힘을 결집하거나 재배치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하려 한다. 이 과정은 선의나 합의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의 권력 추구 성향과 국가 간 경쟁이라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작동한다.

— 한스 모겐소, 『국제정치』

[오답 해설]

ㄱ. 칸트에 따르면 전쟁은 시민에게 생명과 재산의 희생을 요구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그 결정은 군주나 통치자의 전제적 판단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특히 공화정 체제에서는 전쟁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시민들이 전쟁 결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전제정 체제에서는 통치자가 전쟁의 피해를 직접 감당하지 않으므로, 전쟁이 쉽게 결정되고 남용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칸트는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쟁 결정권이 전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오히려 시민의 동의에 기초한 공화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가 전쟁을 결정함에 있어 전제적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시민의 자유와 국가의 법적 질서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덕적 합리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칸트, 『영구평화론』

< 칸트의 영구 평화론 주요 조항 >

①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들

[전쟁 상태가 종식되기 전에 먼저 실행되어야 할 원칙들]

1. 비밀 조약의 금지

미래의 전쟁을 위한 내용이 비밀리에 예약된 평화 조약은 유효하지 않다.

2. 지배권의 상속·교환 금지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상속, 교환, 매매, 기증 등의 방법으로 지배권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3. 상비군의 폐지

상비군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4. 국가 부채의 제한

외부 분쟁을 목적으로 한 국가 부채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국가의 헌법·정부에의 간섭 금지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법이나 정부에 무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6. 전시에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적대 행위 금지

암살자, 독약 사용, 항복 약속 파기, 반역 선동처럼 향후 평화에 대한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적대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②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들

[전쟁 상태를 넘어서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본질적 조건들]

1. 공화정의 원리

국가들은 대표기관과 분리된 행정권을 가진 공화정 정치 체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이 체제가 전쟁을 자제하는 정치적 기반이 된다.

2. 국제법적 질서의 구축

국제법적 연맹 또는 자유국가들의 연합체를 통해, 국가 간 분쟁을 법과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3. 세계시민법

외국인을 대할 때는 호의적이며 적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우할 수 있는 보편적 실제적 권리를 수용해야 한다. 이는 국가 간 상호 통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촉진한다.

ㄷ. 모겐소가 반대할 입장이다. 칸트는 공적인 법률인 국제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격체들을 규합하는 계약의 형태로 실현되는 합법적 상태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각 국가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상태는 평화 유지를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국가 간 연맹이다. 즉 국제법은 국가 간의 평화 유지라는 단일한 의도에 의해서만 체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도는 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할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것이다. 모겐소는 모든 국가가 근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국제적 제도는 평화 유지라는 단일한 이상의 반영일 수 없으며, 강대국에 의해 창출됨으로써만 존재한다. 그는 강대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법의 효과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고 보았다.

만일 이 문장을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틀리다. 모겐소에 따르면 국익은 모든 국가의 1차적 목표이다. 따라서 “단일한 의도라고 서술한 것이 적절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다만, 국익이 목표라는 것과 국제법의 존재 이유가 단일한 의도에 의해 제정된다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보자. 강대국의 국익은 세력권 유지, 약소국은 생존 보장, 해양국은 항행 자유, 내륙국은 국적 안정이라는 의도로 국제법을 제정할 수 있다. 물론 모두 자국의 이익 목적은 맞으나 국익의 의도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단일한 의도= 공통된 목적] 이 아니라는 것이다.

15.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은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다수의 정의관이며, 대체로 거의 질서 정연한 사회 내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법과 제도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⑤

롤스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일지라도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고 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반항이나 개인적 판단으로 실행해서는 안 된다. 시민불복종은 공공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정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정의의 원칙)은 모든 시민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므로,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보장한다. 즉,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공적 정의 원칙에 대한 호소라는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완전 정의로운 사회뿐만 아니라 체제 자체가 부정의한 사회 또한 포함된다.

완전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시민은 법과 제도가 이미 정의 원칙에 부합함을 신뢰할 수 있다.

— 존 롤스, 『정치적 자유주의』

시민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도덕적·정치적 호소로서 의미를 잃는다.

— 존 롤스, 『정치적 자유주의』

② 롤스는 간접적 시민 불복종 개념을 통해 항의 대상과 불복종 대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간접적 시민불복종에서는 시민이 정의 원칙 위반을 항의하지만, 실제 불복종 행위는 법 집행자나 제도적 장치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양심적이고 깊이 간직된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협일 수는 없으며, 경고나 훈계일 수는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타인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간섭은 어떤 행위가 갖는 시민 불복종적 성격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만일 청원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차후에는 강력한 저항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이고 깊이 간직된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경고나 훈계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위협일 수는 없다.

— 존 롤스, 『정의론』

- ④ 홉스는 시민 불복종이 폭력의 사용을 피하는 이유가 원칙적으로 폭력의 사용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비폭력이 시민 불복종자들의 실정을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이다. 그것은 폭력의 사용을 피하고자 하며 특히 사람들에게 대한 폭력의 사용을 피하려 하는데,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폭력의 사용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실정을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해하고 해칠 가능성이 있는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과 양립할 수 없다. — 존 홉스, 『정의론』

16. 로크와 홉스의 사회 계약론 이해하기.

제시문의 갑은 로크, 을은 홉스이다. 로크는 재산의 향유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개인이 지닌 자연권의 일부를 정부에 양도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국가 구성원으로서 보다 확실하게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므로 이러한 불안과 혼란을 피하고자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사회 계약에 동의하여 국가가 성립했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④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든 권리를 갖지만,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권리 양도는 강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안전, 궁극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결정이다.

[오답 해설]

- ① 로크에 따르면 공통의 재판관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쟁 상태는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타인의 인신을 해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로크는 사회 상태에서도 구성원들에게 속하는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자는 그들로부터 그 밖의 모든 것을 빼앗고자 의도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그리하여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본다.

권위를 가진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모든 인간을 자연 상태에 처하는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간의 인신을 해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은, 공통된 재판관이 있건 없건, 전쟁 상태를 초래한다. — 로크, 『통치론』

- ② 로크는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이 권력을 국가에 위임하지만, 주권자의 권력은 시민의 동의와 법적 한계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고 본다. 시민은 입법권이 자신의 생명·자유·재산을 침해할 경우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입법권이 구성원 양도를 초과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권력 남용이다.
- ③ 홉스는 주권자와의 신의 계약을 주장하지 않는다. 주권자는 인민들 간의 사회 계약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이며, 선과 악의 기준은 주권자가 탄생한 이후에 공적으로 정해진다.

신의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어떠한 권리도 양도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불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신의 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깨트리는 행위는 ‘불의’가 된다. 불의란 간단히 말해서 ‘신의 계약의 불이행’을 말한다. — 홉스, 『리바이어던』

- ⑤ 로크가 반대할 선지이다. 홉스는 절대군주론을 주장하며 주권자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모두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국가권력을 분립할 것을 주장하며 절대적인 권한자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다.

17. 엘리아데의 종교관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이며, 인간의 세속적인 삶 속에서 언제나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③

엘리아데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종교적 경험과 신성에 대한 원형적 구조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비종교적 인간이라도, 자신이 속한 문화적·역사적 맥락과 내면적 무의식 구조 덕분에 종교적 비전이나 상징적 경험을 회복할 가능성을 지닌다. 즉, 종교적 체험은 단순히 교리나 의례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내면의 원형적·보편적 구조에서 발현될 수 있다.

현대인이 스스로 '비종교적'이라고 선언할지라도, 그의 의식 구조 속에는 존재와 의미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성스러운 것, 신, 초월적 현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꿈과 음악, 연극 같은 경험 속에서 다른 차원의 시간과 의미를 체험한다. 이 경험들은 그의 무의식 속에서 여전히 호모-렐리기오수스(homoreligiosus)로 행동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즉, 완전히 '비종교적' 인간은 드물며, 비록 의식적으로 종교를 부정할지라도 그의 무의식은 여전히 신성, 가치, 상상적 세계에 영향을 공급받는다.**
 — 미르체아 엘리아데, 『성(聖)과 속(俗)』

[오답 해설]

- ① 엘리아데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의식적 활동과 비합리적 체험으로 구성되며, 순수하게 이성적 인간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다. 비종교적 인간 역시 내면 깊은 층에서 종교적 상징과 신화적 형상과 연결된 무의식을 지니고 있다.
- ② 엘리아데에 따르면, 세속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의 역사적 연속선상에 놓여 있으며 그 유산과 상징, 무의식적 구조를 계승한다. 비종교적 인간이라도 내면 깊은 층에서는 종교적 상징과 신화적 형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 종교적 경험의 영향을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④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은 오히려 세속 세계를 넘어서는 실재, 즉 성스러운 것이 현현하는 사건을 삶의 핵심적 의미로 받아들인다. 종교적 인간에게 중요한 사건은 일상적 차원에 한정되지 않으며, 성스러운 실재가 세계 속에 드러나는 사건(성현)이다.
- ⑤ 엘리아데에 따르면 고정불변의 인간상을 거부하며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종교적 인간이다.

비종교적 인간은 존재의 근원을 초월적 실재나 신화적 원형에 귀속시키지 않고, 오로지 역사적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 그는 더 이상 성스러운 시간의 반복에 자신을 위치시키지 않으며, 자기 삶을 어떤 초시간적 의미의 현현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긍정하고, 의미와 가치를 생성하는 근원을 인간 자신의 행위와 선택에서 찾는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이 성스러운 시간으로부터 단절됨으로써 획득한 자유이지만, 동시에 존재의 궁극적 의미를 역사성 속에 가두는 위험을 내포한다. 이때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이 역사의 산물이자 동시에 역사의 창조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떠안게 된다.
 — 미르체아 엘리아데, 『성(聖)과 속(俗)』

18. 해외 원조에 대한 싱어와 노직의 입장 파악

제시문의 갑은 싱어, 을은 노직이다. 싱어는 큰 희생 없이 타국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하고,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노직은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여야 하며, 시민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③

노직에 따르면 정의로운 분배는 재화의 결과가 아니라 취득·이전 과정의 정당성에 의해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조 자체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개인이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을 자발적으로 이전하여 타인을 돕는 경우, 이는 소유권 행사에 포함되며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조는 강제적 재분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이전이므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노직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며 그저 칭찬받을만한 행위이다.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여 타인을 돕는 행위는,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따라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 해외의 곤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평가가, 동일한 목적을 이유로 한 국가의 강제적 세금 징수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개인이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그 개인에게 속하며, 타인의 선을 증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은 개인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로버트 노직, 『무정부·국가·유토피아』

- ① 싱어에게 도덕적 행위의 정당성은 행위가 어떤 형식의 명령을 따르느냐에 있지 않고, 그 결과가 고통을 얼마나 줄이고 이익을 얼마나 증진하는가에 달려 있다. 인종이나 성에 근거한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는 요구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칸트적 의미에서 보편적·무조건적 의무, 즉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될 수는 없다. 싱어는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합리적 존재의 형식적 존엄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고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이해관계에 둔다. 따라서 차별 극복을 위한 원조 역시, 어떤 의무 형식에 의해 강제되기보다는, 실제로 고통을 감소시키고 선호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산출하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② 싱어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는 행위가 고통을 얼마나 줄이고 선을 얼마나 극대화하는가에 따라 옳고 그름이 판단된다. 동일한 자원을 사용할 때 더 많은 고통을 줄이거나 더 큰 생존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원조하는 것은 전체 효용을 극대화한다.

만약 내가 길을 가다 얇은 연못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본다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옷을 더럽히거나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도덕적 고려에서 결정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비교적 작은 희생으로 더 큰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판단은 거리, 국적, 정체성, 혹은 감정적 친밀성과 무관하다. 원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우선하는 것이 공리의 원리를 위반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리의 원리는, 동일한 희생으로 더 많은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포함한다. 가장 큰 효과를 낳는 곳을 외면하고 덜 효과적인 방식에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고통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공리의 원리에 반한다.
— 피터 싱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 ④ 노직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이를 타인을 위해 사용하도록 강제받지 않는다. 원조를 사회적 책무로 규정하면 국가가 조세나 제도를 통해 강제적 이전을 정당화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소유권과 자기 소유권을 침해한다. 노직은 원조가 자발적 선택으로서의 자선일 경우에는 허용하지만, 의무로 제도화되는 순간 정의에 반한다고 본다.
- ⑤ 갑(싱어)은 찬성, 을(노직)은 반대할 입장이다. 싱어에 따르면 해외 원조는 윤리적 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노직은 원조는 자발성의 영역이며 원조를 목적으로 한 국가의 세금 징수는 강제 노동과 같다고 비판한다.

19. 칸트와 베카리아의 형벌론 이해하기

제시문의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응보적 정의관에 따라 누군가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가했다면 자신이 유발한 해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동일한 정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카리아는 형벌은 사회 계약에 기초하며, 그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교화에 있기 때문에 중신 노역형이 사형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정답: ③

- ㄴ. 칸트에 따르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범죄 행위를 의욕한 범죄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즉, 이는 모든 범죄자가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칸트는 모든 범죄자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형 찬성론자가 아니라,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범죄에 상응하는 응보적 형벌을 주장한다.

공적인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한쪽보다 한쪽으로 더 기울지 않는 동등성[평등]의 원리이다. ...(중략)...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 칸트, 『윤리형이상학』

- ㄷ. 베카리아에 따르면 국가의 형벌권은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이 양도한 권리의 범위 안에서만 정당화된다. 따라서 사형 제도의 정당성 역시 개인이 자신의 생명권을 계약을 통해 양도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베카리아에 따르면 생명권은 사회 계약에서 양도한 권리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으므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 2024학년도 6월 9번

[오답 해설]

- ㄱ. 칸트와 베카리아 모두 동의할 선지이다. 칸트는 형벌권의 형성은 예지체 인격의 동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상체 인격에 속하는 범죄자는 형벌권 형성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베카리아는 모두가 자신의 자유 중 일부분을 희생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이 형성되므로 범죄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형성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형법률을 구술하는 공동입법자로서 나는 신민으로서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자와 동일한 인격일 수는 없다. 무릇 그러한 자로서, 곧 범죄자로서 내가 입법에서 표를 가질 수 없다. ...(중략)... 무릇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형벌받기를 의욕하는 범인의 약속이 놓여 있어야 한다면, 이 자에게 형벌 받을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도 위임되지 않을 수 없을 터이겠고, 범죄자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겠다. — 칸트, 『윤리형이상학』

- ㄹ. 베카리아에 따르면 사형과 종신 노역형의 각각의 범죄 예방 효과 관계는 이분법적이지 않다. 이분법적이란 각각의 범죄 예방 효과가 0과 1의 관계처럼 하나는 효과가 있고, 하나는 효과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베카리아에 따르면 사형도 범죄 예방 효과는 있으며 종신 노역형 또한 그렇다.

20. 맹자와 석가모니의 입장 파악하기

제시문의 갑은 맹자, 을은 석가모니이다. 맹자는 인간 본성에 인의(仁義)의 마음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나쁜 환경과 감각적 욕망 때문에 선한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수양을 통해 본성을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가모니는 모든 현상이 인과 연의 결합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이 겪는 괴로움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얽매임에 집착하는 것이 각종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본다.

[정답 해설] 정답: ④

석가모니에 따르면 나쁜 행위와 선한 행위 모두 업이 되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물론 불교에서 선한 행위의 실천을 주장하지만,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러한 선업을 쌓는 것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는 만물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연기법을 깨달아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야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 ① 맹자에 따르면 인간의 선한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 선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구방심(求放心)을 수양법으로서 강조한다.
- ② 맹자는 인간에게 인의예지의 단서인 사단(四端)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았지만, 이것이 곧 완성된 덕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사단은 자라날 가능성일 뿐이며, 실제 덕인 사덕(四德)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실천과 함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맹자는 도덕적 감정과 판단이 선천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로운 행위로 실천하지 않으면 충분히 발현될 수 없다고 본다.
- ③ 석가모니에 따르면 자기와 타인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깨닫는 무아(無我)·불이(不二)의 지혜가 성취되면[자타불이], 타인의 고통을 곧 자신의 고통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타인의 괴로움을 제거하려는 마음, 즉 자비(慈悲)가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 ⑤ 맹자와 석가모니 모두 성인이 되기 위해 따라야 할 길이 있다고 본다. 맹자는 도를 인간 본성에 내재한 인의예지의 도덕적 질서로 이해하며, 이를 따르는 삶을 통해 인간은 본래의 선한 본성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석가모니는 도를 고(苦)를 소멸로 이끄는 올바른 길, 즉 팔정도(八正道)를 중심으로 한 수행의 길로 제시한다. 이 도는 무명과 집착을 제거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며, 이를 따르는 자는 번뇌를 벗어난 성자(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